

□ 정부시책 □

산업자원부, '국가기술이전센터' 설립 추진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술이전사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될(가칭) 「국가기술이전센터(한국기술거래소)」가 만들어진다. 또 기술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및 중개인(기술브로커)에 대한 육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들 기술브로커에 대한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26일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장관과 김병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갑수 한국종합기술투자 사장, 이선 산업연구원장, 박호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종구 생산기술연구원장 등 산업·연구·금융계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술거래제도 확립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산업기술정보원을 「국가기술이전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이 센터 내에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기술평가기관의 기능을 확충하거나 민간과 정부가 공동출자해 「한국기술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장

기적으로 기술평가 및 거래관련 시장이 성숙되면 이들 기관을 민영화해 민간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신용보증기관의 기업·개인에 대한 기술 및 신용평가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또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자금을 기술투자시장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해 정부가 「국가기술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우리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해 기술거래소를 설치·운영하고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아·태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우리나라가 품질보증체제 인증(ISO 9000)에 대한 아·태 국제상호인정협정(PAC - MLA)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ISO 인증서의 국제적 상호 통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국내 ISO 9000 획득기업의 해외 진출시 무역장벽이 크게 해소되고 수출 원활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ISO 9000 인증서에 대한 각국의 상호 불인정으로 인해 공공조달, 국제입찰 등 수출시에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엄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정기관 협력기구 총회에서 MLA(국제상호인정협정)에 서명,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8번째로 MLA 가입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전세계적으로 19개국이 가입된 상태다.

MLA는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서에 대해 자국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협정으로서 발효시기는 오는 9월 총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MLA 가입을 위해 품질경영촉진법령 등 관련규정을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왔으며, 지난 6월 PAC - MLA 심사단의 최종심사결과 가입이 확정됐다.

산자부는 국내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MLA 회원국의 인증서에 대해 국내인증서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각종 입찰제한 규정 폐지 등을 각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산업피해구제제도 적극 활용 홍보

현재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고 덤핑수입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체들은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KOTRA 신사옥 국제회의실에서 '수입

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된 16개 품목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으로서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합정도가 높은 실정.

올해 내수시장 규모만 13조 4천억원으로 일본산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될 경우 그 피해 정도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¹⁾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품질향상을 꾀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산업피해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덤핑 제도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덤핑사실 입증, 실질적인 피해 등 사실 입증, 덤핑수입과 실질 피해간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등 발동요건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美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실질적인 산업피해 우려만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는 최근 추세는 우리 업체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수입량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동요건이 엄격한 실정. 그러나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선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만큼 잘 활용할 경우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른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 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로 인해 상품 수입이나 보조금 수입이 늘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장치라는 것.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법에 반덤핑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6년부터 산업피해구제기금을 마련, 변호사 수임료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UPS 등 6개 제품 고효율 에너지 품목에 추가

앞으로 모니터 절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원 등 6개 품목이 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에 심 냉동기, 산업 및 가정용 가스보일러, 펌프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

관에서는 지난 '96년 말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은 총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이번에 추가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지정된 모니터절전기·무정전전원장치·가스보일러 등이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절감률이 7~44%에 달해 대부분 2년 이내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또 의무사용 조항이 신설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하거나 기술적 신뢰성 및 경

제성이 입증된 26mm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인체감지 조명기구, 고조도 반사갓 등 6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산자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을 우선 지원해주고 대상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은 68개 업체의 216개 모델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 5.5%로 30억원 이내의 생산시설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과 3억원 한도내의 단기운전자금이 지원되며 에너지기술개발 시범보급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 수출특공대 훈련 돌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 특공대'가 조직됐다.

중소기업청은 2일 해외시장 개척요원 2백명을 선발, 한달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교육시킨 뒤 9월초부터 4개월간 52개국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응모자 6백76명중 외국어시험 및 면접을 거쳐 뽑혔다. 여성이 46명으로 23%

를 차지했다.

전체의 97.5%가 대졸이상 학력을 소지했으며 20~30대가 93%에 이른다.

이들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미개척 시장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에 배속된다. 체재비는 전액 정부가 낸다.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공대 요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들고 나가

바이어를 찾거나 시장조사 또는 박람회 참가를 통해 현장경험을 쌓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이들과 짝을 맺을 중소기업을 모집했으며 4백98개사가 신청했다. 4개월간의 해외파견 훈련이 끝나면 이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무역업으로 창업하게 된다.